https://doi.org/10.22718/kga.2021.5.2.045

대전시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

김학만** 우송대학교
권정만*** 충남대학교

논문요약

현재 사회서비스원은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 광역지자체로 확산되는 시점에 있다. 특히, 대전시의 경우 17개 시·도 중 10번째로 2021년 1월에 개원하고, 본격 운영 중에 있어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더욱 더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차원에서 대전시 사회서비스원의 성공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시범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검토 등 현황 분석을 하고, 대전시의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시 운영 방안과 예상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대전시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대전시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유사기관 및 계획과의 중복(첩)의 비효율성 해소, 독립채산제 폐기, 많은 재정 및 예산 투자 확보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주제어 : 사회서비스 정책, 사회서비스원, 공공성

* 이 논문은 2021년도 우송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과제임.
** 교신저자 *** 주저자

www.kci.go.kr

Ⅰ. 문제제기

지난 10년간 사회서비스 정책과 전달체계는 바우처를 통한 수요 창출과 개방적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중심으로 한 민간영역(부문)에 의한 공급 체계인 '시장화'가 사회서비스 공급 정책의 원리로 자리 잡아 영세 제공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과다 경쟁을 초래하여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근로조건 악화,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제기되었다(이태수·남기철·김형용 2019; 김보영 2019).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역점 사업으로 설정하고[1],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 광역지자체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사회서비스원과 관련된 주요 논의를 살펴보면(강혜규·김회성·안수란 2019), 사회서비스원은 민간 기관을 중심으로 확대된 서비스 공급체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어 국·공립시설 및 기관의 직영을 통한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서비스 품질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사회서비스원의 시범사업 과정에 있어서 보육·장기요양·주요 서비스 영역 관계자들의 이해가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았고, 설립 형태, 직영 및 위탁 사업 범위, 본부 및 산하 시설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사회서비스원 공공선 실현을 위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운영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2] 민간 기관(민간 법인과 개인 시설)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한 모범적 운영 모델 확산만으로는 공공성 실현에 한계가 있으며, 민간 기관에서 제

1) 현재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 부문과 전달체계 쟁점은 공공성과 분권화 기치 아래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통합 돌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치매국가책임제 등이 있으며, 이 중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이라 할 수 있다.

2) 공공성 강화는 사업운영 주체의 공공비율을 높임과 동시에 사업운영 주체에 관계없이 균등한 서비스 품질을 담보할 적절한 지원과 관리의 통제 기제가 작동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강혜규·김회성·안수란 2019).

www.kci.go.kr

공되는 서비스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적절한 관리 및 규제 방안이 동시에 필요하다.[3] 특히, 대전시 사회서비스원의 경우 2021년에 설립 출범하면서 운영주체에 대한 관심과 사업 확산에 집중되어[4]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마련이 더욱 더 절실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적절한 관리 방안을 위해 4개 광역자치단체 시범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전시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방안과 예상 문제점을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대전시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Ⅱ. 선행 연구 고찰 및 분석 논리

1. 선행 연구 고찰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관련된 논의는 우리나라 전통적 사회서비스 공급구조가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미흡하고 민간 의존도가 높다고 지적되어(박정선 2007; 김영종 2012),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이 사회서비스 공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확대로 인한 공급체계의 변화와 설립 형태를 중심으로 하는 논의로 시작되어(강혜규 2007; 신경희·남우근 2013;

3) 예를 들어, 사회서비스의 특정(욕구의 위기도, 사업의 수익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운영 방식과 품질 준수에 대한 규제를 차별화하는 전략이 검토될 수 있다(강혜규·김회성·안수란 2019).

4) 사회서비스 행위주체로 대전시 사회서비스원은 대전복지재단의 사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사회서비스원의 본질적인 기능을 추가하여 운영하는 형태는 여타의 다른 지역에서의 확장기 또는 안전기에 추구하는 조직의 형태이고, 대전시 사회서비스원의 시설운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설립·운영과 노인요양시설, 종합재가센터 설립, 공공센터 수탁 및 운영 중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설치, 민간제공기관 지원 사업으로, 시설안전점검 지원, 경영컨설팅 지원, 대체인력 지원,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방안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대전시 사회서비스원은 대전시 복지전달체계의 통합화와 효율성 제고, 사회서비스의 수요 증대, 제2의 출연기관 설립에 따른 재정부담 비판에 대응할 수 있고, 대전복지재단의 정책기능과 협력 사업 등을 유지하면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와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강화 시켜야 할 것이다.

www.kci.go.kr

김연명·박상희 2012)[5], 사회서비스 공공성 증진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서울복지재단 2016; 이재훈 2018; 이만우 2018; 보건복지부 2018)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는 주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긍정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기존의 사회서비스 공급기관들이 보여준 문제점 해소를 위한 쟁점과 과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운영자나 종사자의 입장이나 상황에 대한 고려나 논의(김연명 2017; 임정빈·유재남 2019)와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따른 비판적 쟁점과 관련한 폭넓은 연구(김윤수 2018; 김보영 2019; 이승호·양난주 2020)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 제기하고 있는 쟁점들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서비스 공급 주체로서 종사자와 운영자의 인식과 활동을 중심으로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6]

한편, 대전시 사회서비스원 관련 선행 연구도 설립을 위한 대전세종연구원(2019)에서 설립 기반을 다지는 설립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요컨대,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사회서비스원의 당위적 명분과 운영주체에 대한 공공성 강화 문제에 한정된 설립 계획·모델 정립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일부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인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그 대안 제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2.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논의 : 본 연구의 분석 논리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은 공공성 개념의 주체, 절차, 그리고 가치 측

5) 특히, 광역지자체별로 설립하는 방안(김연명 2017), 중앙정부에서 설립하는 방안(한국노총 2016), 광역지자체별로 설립하되 아동보육본부를 둠으로써 보육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백선희 2017) 등이 제시되기도 하였다(김용현·손동기 2018).

6)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인식 및 태도, 사회서비스 질 제고 활동,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한 공공성 강화 등이 그것이다.

www.kci.go.kr

면에서 다차원적으로 설명될 수 있으나, 국가의 적극적 행위로서만 공공성을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 사회서비스원에서의 공공성 논의는 절차적 권리성에 주목하는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도 도덕적 판단으로서 사회의 목표를 강조하는 공동체주의 관점에서도 국가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성은 한국 사회의 특수한 역사적 조건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전달체계의 공공성은 공공 이익 도모를 위해 사회 구성원 전체 또는 다수와 관련한 특정 영역에 민간 위탁 등의 형태를 포함한 정부개입 및 조정, 그리고 시민사회의 참여와 점검이 요구되는 성질을 의미(김진석·민소영·유동철·홍영준 2017, 24)한다는 인식은 한국적 맥락에서 타당하다. 즉, 한국 사회에서 사적 문제가 공적 문제화되고, 공동체가 책임과 비용을 감당하는 과정을 공공성이라 한다(양기용 2013). 요컨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은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공동체와 일치시키는 방향(이태수·남기철·김형용 2019, 63-92)으로만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사회서비스 정책활동이 민간의 공급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일자리의 질을 제고 하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이어서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으며, 현재의 민간부문의 서비스 제공 체계를 과도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만한 변화 속에서 공공의 역할을 늘려가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재원배분 측면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사회서비스 재정규모를 점차적으로 늘려가면서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정부의 역할과 기여를 늘려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라는 의견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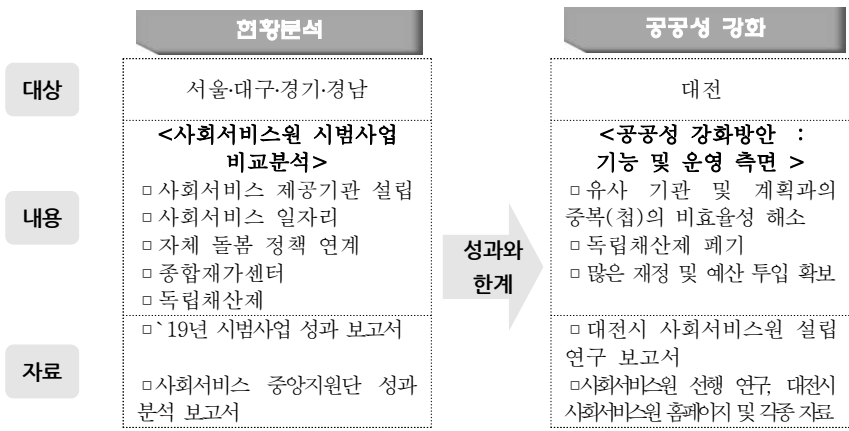
결국,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하여 포괄적인 개념만 구상하였을 뿐이지 설립과 운영에 관한 핵심 요소들이 누락 되었거나 부족한 상황이다. 즉, 사업의 운영 주체뿐만 아니라 기능 및 운영 측면에서의 공공성, 그리고 그 긍정적인 효과 및 성과

www.kci.go.kr

등에 대한 모든 측면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본 연구의 분석 논리를 연구 흐름 등을 고려하여 살펴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본 연구의 분석 논리



Ⅲ. 사회서비스원의 시범 사업 추진 현황 분석

1. 사회서비스원의 시범 사업 추진 현황

문재인 정부 선거공약으로 시작되어[7], 출범 1개월 후 사회서비스공단[8] 설립은 2017년 6월 1일자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7) 사회서비스 분야의 구조적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2017년 대선 중에 공약사업 즉, 제19대 대통령 선거 공약사항으로 보육·장기요양·장애재활을 중심으로 국공립사회서비스 제공을 확충하고 사회서비스 공단을 설립하여 국공립 사회서비스 시설에 대한 직영 체계와 더불어 민간서비스 제공시설 지원 및 운영도 국공립시설과 동일하게 공공성 강화를 구축한다는 취지이다.

8) 2017년 대선 공약시에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었다가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2018년 5월 16일 남인순 의원의 국회 발의시에는 사회서비스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www.kci.go.kr

보고되어 공공인프라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광역 시·도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여 공공성을 확장 시키는 내용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18년 5월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 방안이 발표되었다(김용현·손동기, 2018).

보건복지부는 2018년 9월 사회서비스진흥원에서 사회서비스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 계획(안)'을 발표하여, 2019년 서울시, 대구시, 경기도, 경남도 4곳에서, 2020년에는 인천시, 세종시, 광주시, 강원도, 충남도, 대전시, 전남도 7곳에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 운영되었다.

이 중 2019년 서울시, 대구시, 경기도, 경남도의 시도별 4개년 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살펴보면, 국공립 시설의 수는 전체 총 31개소에서 170개소로, 종합재가센터는 10개소에서 70개소로 종사자수는 1,740명에서 11,200명으로 확충할 계획이고, 시설유형으로는 4개소 모두 어린이집과 요양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구시는 노숙인 시설, 장애인 시설, 기타 공공센터 등을 추가로 포함하고, 경기도는 다함께 돌봄센터, 기타 공공센터 등을 추가로 포함하며, 경남도는 커뮤니티케어센터 등을 추가로 포함하여 추진 중에 있다.

민간시설 지원 사업으로는 4개소 모두 경영컨설팅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구시, 경기도, 경남도 3개 지역은 공통적으로 시설 안전점검 지원, 대체인력지원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같이, 세부적인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 사례를 종합 검토해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사회서비스원 시범 사업 추진 사례 종합 검토

(단위 : 개소, 여명)

구분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
설립 형태	재단법인	재단법인	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 시기	2019년 4월	2019년 3월	2019년 10월※	2019년 5월

www.kci.go.kr

설립 운영 방향	- 시급성 및 서비스 체감도가 높은 장기요양, 장애활동 지원, 보육중심 선도 추진		- 문제발생 국공립 시설 우선 수탁 - 대구 특화형 통합 학대예방센터 설립 운영 - 대구형 복지정책 연구 개발		- 커뮤니티 케어 등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연계 - 종합재가센터 설치 운영 - 사회서비스 품질 관리 지원 - 시군사회서비스 체계적 관리 지원		- 시군 직영 및 위탁시설은 도와 시군간 MOU 체결로 서비스원에서 직접 운영 - 커뮤니티 케어 센터 및 종합 재가센터 통합 운영	
	-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운영 - 종합재가센터 설치 운영 - 민간기관 지원 - 서비스 품질 관리		-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운영 - 통합학대예방센터 및 종합재가센터 설치 운영 - 민간기관 지원 - 서비스품질관리		- 국공립 시설 수탁 운영 - 종합재가센터 설치 운영 - 사회서비스 품질 관리 지원 - 시군 사회서비스 체계적 관리 지원		-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운영 - 커뮤니티 케어 센터 및 종합재가센터 통합 운영 - 민간기관 지원 - 사회복지정책 연구 및 개발	
본부 조직	1실 4팀 22명 (2022년 72명)		1실 3팀 24명 (2022년 80명)		1본부 3팀 20명 (2022년 70명)		1본부 4팀 20명 (2022년 70명)	
예산 규모	83.7억원		21.4억원		19.8억원		21.6억원	
국공립 시설	5 (‘19)	20 (~‘22)	9 (‘19)	28 (~‘22)	10 (‘19)	97 (~‘22)	7 (‘19)	25 (~‘22)
종합 재가 센터	4 (‘19)	25 (~‘22)	2 (‘19)	8 (~‘22)	2 (‘19)	29 (~‘22)	2 (‘19)	28 (~‘22)
종사자 수	550 (‘19)	3,900 (~‘22)	470 (‘19)	1,500 (~‘22)	330 (‘19)	4,300 (~‘22)	390 (‘19)	1,500 (~‘22)
시설 유형	어린이집, 요양시설 (‘20년 이후)		어린이집, 요양시설, 노숙인 시설, 장애인 시설, 기타 공공센터 등		어린이집, 요양시설, 다함께 돌봄, 기타 공공센터 등		어린이집, 요양시설, 커뮤니티 케어 센터 등	
민간 시설 지원 사업	① 경영 컨설팅		① 시설 안전점검 지원 ② 경영컨설팅 ③ 대체인력지원 ④ 민관협력지원사업		① 시설 안전점검 지원 ② 경영컨설팅 ③ 대체인력지원 ④ 인력수급지원		① 시설 안전점검 지원 ② 경영컨설팅 ③ 대체인력지원 ④ 교육훈련지원	

※ 2019년 4월 경기복지재단에서 ‘사회서비스원시범사업단’으로 운영 2019년 10월 별도 설립

출처 : 보건복지부 2019; 양성욱, 최길수, 류진석, 김상우, 김경현2019, 85-87.

www.kci.go.kr

2.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의 운영 성과와 문제점

사회서비스원은 사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안착과 정책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고 보여 나름 성공적으로 시작했다고 할 수 있겠으나, 문제는 본래의 설립 취지와 기대에 못 미치는 사회복지인력의 채용과 돌봄 센터와 국공립 센터의 운영·설립에만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의 운영 성과와 문제점을 2019년 시범사업 성과와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의 성과 분석을 통해, 실제 사회서비스 공급에 있어서는 어떻게 사회서비스원을 평가할 수 있는가에 대해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설립, 사회서비스 일자리, 자체 돌봄 정책 연계, 종합재가센터, 독립채산제 관련 운영 성과 및 한계 등으로 살펴보고자 한다.[9)]

1)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설립 관련 성과와 한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설립과 관련해서는 서비스 제공기관 위탁운영 4개 지역 어린이집 9개소, 종합재가센터 10개소 등 총 38개소의 시설을 위탁 운영하게 되었고, 사회서비스원 본부와 운영시설에 총 768명을 채용하였으며, 그 중 90%가 넘는 직원을 직접 고용하였다.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지역(서울시, 대구시, 경남도)에서는 95% 이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였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생활임금 기준을 적용하여 민간영역의 최저임금 대비 20% 이상 실질임금이 상승되었고, 그 외 가족수당 등 각종 부가급여와 복지후생 제도를 운영하여 양질의 근로조건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불어,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추진과정에서 노동권 보장과 시민사회 참여를 위한 노력[10)], 그리고 인력채용에 있어서도 NCS기반의 블라인

9) 사회서비스원의 운영과 관련한 다른 문제점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서비스질에 대한 고객만족도 저하와 부실 운영에 따른 예산상의 문제점 등을 들 수 있다.

www.kci.go.kr

드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지침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력 채용과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관련해 시민사회 참여 노력과 투명한 인력 채용 및 운용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11]과 원장 임면[12]의 문제점으로 인한 한계가 있어 보인다.

2) 사회서비스 일자리 관련 성과와 한계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사회서비스원 종사자의 직접 정규직 채용과 양질의 근로 조건 제공 등은 사회서비스원이 공적인 사회서비스 위탁·운영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당초 사회서비스원은 기존의 시장과 경쟁에 매몰된 사회서비스의 문제는 공공 공급 확대를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단지 광역 지방정부마다 '착한' 운영기관 하나씩 설립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당초 사회서비스원의 목적을 상기해 보면,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는 "이용자의 수요에 대응하는 보다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다(관계부처 합동, 2018: 4). 이런 차원에서 보면, 사회서비스원의 시범사업의 성과는 양적인 부분이나 질적인 부분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

10)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노동이사제를 신설하고, 노사 교섭창구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교섭에 나섰고, 경기도는 노동계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운영하고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과 협의를 진행하였다.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은 제2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지칭되는 지역 내 희망원을 위탁운영하면서 이 문제에 대응해왔던 중심 단체인 희망캠프와 대화를 진행하고, 대구 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의 워크숍, 토론회에 참여하는 등 시민사회와의 소통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왔다.

11) 사회서비스원의 고용 및 노조 가입 등의 부담에 대한 한국경제 2020.9.17.일자 "민주노총, 사회서비스원 노조 싹쓸이" 보도자료 참고.

12) 사회서비스원 원장 임명 문제점을 다룬 연합뉴스 2020/05/12. "광주사회서비스원 초대 원장 후보에 시장 캠프 출신 등 2명"과 데일리안 2019/10/05. 김명연 "서울 사회서비스원, 박원순 낙하산" 보도자료 참고.

www.kci.go.kr

3) 자체 돌봄 정책 연계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및 한계

자체 돌봄 정책 연계에서는 대구시, 경기도, 경남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지역의 사회서비스원에서도 커뮤니티 케어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서울시와 같은 긴급 돌봄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차별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자체적인 돌봄 정책과 연계를 통한 경쟁 극복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 부분을 해소하였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자체적인 돌봄 프로그램인 돌봄SOS를 위한 제공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등 서울시의 자체적인 돌봄 정책과 연계하여, 민간과 장기요양시장에서 똑같이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예산사업으로 진행되는 돌봄SOS를 통해 별도의 서비스 공급 역할을 수행하였고[13], 민간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2인 이상의 지원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과 같이 현행 제도 내에서는 충분한 돌봄이 어려운 사례나 단기적인 긴급 돌봄 서비스와 같이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사례를 종합재가센터로 이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기존에는 방치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적 돌봄을 수행하면서 종사자의 자긍심이나 업무만족도를 높였다.[14]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는 정책적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부 지역이나 일부 대상에게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뿐이고, 추가적인 예산지원 없이는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제대로 확대되기 어렵다. 결국, 서울시의 성과를 모든 지역의 성과로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4) 종합재가센터 관련 성과와 한계

종합재가센터는 사회서비스원의 필수 시설이고, 공공에서 운영하는

13) 긴급하고 단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SOS에 민간이 참여하기는 어렵고, 기존 시장에서는 민간과 경쟁이 안 되는 종합재가센터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은 결과이기도 하다.

14) 이러한 서울시의 차별화된 접근은 그만한 서울시의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19년만 해도 81억 원의 시비를 투입하였고, 2020년에는 돌봄SOS 사업에 선정된 자치구를 중심으로 종합재가센터를 추가로 9개소를 설립한다는 계획 아래 4배가 넘는 3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서울시가 종사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www.kci.go.kr

최초의 종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다. 종합재가센터는 한 개 기관에서 다수의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 종사자 직접고용 및 월급제 도입을 통한 고용 안정성 강화, 비영리성 추구 등을 기본 운영방향으로 하고 있다.

종합재가센터는 2019년 현재 4개 지역 사회서비스원에서 총 1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15] 하지만, 서울을 제외하고는 10여명 안팎의 이용자를 확보하는데 그치고 있으며[16], 종합재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있어 해결되어야 할 다양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문제[17]와 운영과정상의 문제[18] 등이 나타났다.

결국, 상술한 문제점과 쟁점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사회서비스원이 지향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책임성 확보,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서비스 질 개선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 독립채산제의 문제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표준모델'을 만들었다. 사회서비스원 지원인력 인건비와 사업비를 절반씩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노인요양 등 개별 사업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는 것이다(관계부처 합동, 2018). 그런데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회적 기업과 같은 비영리 기관조차 정부의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 관련 규정을

15) 특히, 대전시의 경우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통해 2021년 3개소의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고,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총 8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16) 양질의 근로조건을 제공하겠다며 제공인력을 채용했지만, 설립 초기라 하더라도 정작 이용자가 없으니 교육시간이라도 채워서 급여를 제공하거나, 그마저도 어려운 경우 제대로 급여조차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17)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의 문제로 첫째, 서비스 내용(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장애인활동지원 등)의 중복, 둘째, 한정된 서비스 이용자(장기요양서비스 등급자,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구간 판정자 등)의 공유, 셋째, 훈련된 제공인력의 공공기관 이동 문제 등이다.

18) 운영 과정상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첫째,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인한 사업비·인건비 등 충당의 어려움, 둘째, 신규 이용자 모집과 이탈 방지의 어려움, 셋째, 공공기관 채용기준 적용에 따른 요양보호사 상시 채용의 어려움 등이다.

www.kci.go.kr

모두 준수하면 현행 수가구조에서는 운영이 불가능하다. 종합재가센터 역시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하면서는 기본적인 운영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김윤수 2018).

서울·대구·경기·경남 사회서비스원 모두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특히,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은 요양보호사 23명의 인건비로 2억 8,000만원을 지출했다. 대구시가 지난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나설 때만 해도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이다.

이와 같이, 현실성 없는 독립채산제 원칙은 공공 공급기관으로 위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과 똑같은 경쟁시장으로 밀어 넣고 있어서 사회서비스원은 경쟁을 강요당하고 있지만, 민간업자에 대한 경쟁력은 가질 수 없는 모순적 상황에 빠져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애초부터 왜 사회서비스원을 추진하는지 그 근본 취지부터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을뿐더러 기본적으로 유효한 정책으로서 지속 가능성마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는 광역 지방정부에서는 오히려 보건복지부의 독립채산제 원칙이 이러한 책임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장치가 되는 변질의 가능성이 보인다.

Ⅳ. 대전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 논의

1. 대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계획의 개요

대전시는 2021년 1월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였다. 2020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의 2020년 2단계 사회서비스원 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대전복지재단과 대전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관련 업무대행 협약(2020년 6월)을 맺고, 2020년 7월 1일 부터 2020년 12년 31일까지 대전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진행하여, 2021년 1월 1일에 대전복지재단에서 대전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전환하고[19], 사회서비스원의 원활한

www.kci.go.kr

운영을 위해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의회 상정하는 등(김가희 2020), 2020년에는 추진계획 수립 및 기반조성을 하였고, 2021년에서 2022년까지는 대전시 사회서비스원의 확장, 그리고 2023년에는 안정 및 역량 강화로 추진 로드맵을 계획하여 진행하고 있다(양성욱·최길수·류진석·김상우·김경현 2019).

한편, 대전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방향은 복지재단이 수행해 온 정책연구와 민간협력 사업에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기능을 함께 수행해 대전시 복지정책과 지원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사업운영을 위해 현 대전복지재단 조직을 1실 4부의 사회서비스원 본부와 직영(산하)시설로 개편해 2021년 개원 시 본부와 12개 직영시설 및 센터, 인력 427명의 규모로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직영시설과 인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국·공립 시설 직접 운영,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재가서비스 직접 제공, 민간 제공기관에 재무, 회계, 노무 등 상담 및 자문, 대체인력 파견 업무,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개발, 종사자 교육, 돌봄 특수시책 추진, 복지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 등이다(중도일보 2020, http://m.joongdo.co.kr/view.php?key=20200503010010284).

재정투여 예상액은 2025년까지 대전시 사회서비스원 관련 예산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대전시 사회서비스원 관련 예산(추정액)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586,024	879,036	1,172,048	1,465,060	2,051,084
노인요양 시설		1,921,615	전동	2,347,389	2,773,163

19) 대전시는 대전복지재단을 사회서비스원의 시범 사업 수행 사회서비스원으로 단계적인 통합 또는 기능 전환하는 방식으로 설립방안을 정하였다. 이는 대전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을 양립하여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고, 재단 설립 절차의 복잡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www.kci.go.kr

다함께 돌봄센터	159,820	399,550	-	-	-
종합재가 센터	492,864	985,728	1,478,592	1,971,456	2,464,320
조직운영 경비 (인건비 제외)	980,000	980,000	980,000	980,000	980,000
조직운영 경비 (인건비)	421,053	421,053	842,100	1,684,200	1,684,200

참고 : (양성욱·최길수·류진석·김상우·김경현 2019, 213-219).

2. 대전시 사회서비스원 공공성 강화 방안 논의

대전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방향과 운영 모델 제시에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유사기관 및 계획 중복(첩)의 비효율성 해소, 독립체산제 폐기, 많은 재정 및 예산 투입 확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유사기관 및 계획 중복(첩)의 비효율성 해소

유사기관 및 계획과의 중복(첩)의 문제는 역할 정립의 명확화가 가장 필요로 하는 공공성 강화 방안이 될 것이다.

대전시 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신설된 사회서비스원과 대전복지재단의 역할이 모호해 질 수 있으며, 현 정부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커뮤니티 케어와 사회서비스원의 중복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계획과의 중복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종합재가센터를 설립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중복투자가 될 수도 있다. 노인 주야간보호센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구 단위 지역에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한다면 중복·경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영유아 돌봄 관련 지원 기관으로 유아교육진흥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존재하고 있는데, 현재 시범사업 계획과 같이 사회서비스원이 추가 설립된다면 유사 기관과의 업무가 중복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공공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인 치매안심센터가 설립되었지만, 노

www.kci.go.kr

인돌봄서비스와의 중복이 불가피해 보이며, 대전시돌봄통합센터 등 유사 기관 및 기능 등이 상존해 있어, 이들과 어떻게 역할 중복을 피하고, 상충하지 않느냐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

더불어, 기초 지방정부의 경우는 사회서비스의 직접 제공에 대한 책무성을 지닌 주체로서 시설의 설치로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어 광역 지방정부 단위에서 설립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과 기초 지방정부와의 기대 및 역할 등에 대한 정립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사기관 및 계획과의 중복(첩)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의 위탁사업에 대한 운영 성과, 새로 신규로 진입하는 사회서비스 사업과 공적 책임성이 요구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단계적 편입, 사업선정의 원칙 재설정, 종사자의 고용안정 보장, 운영 사업 범위 결정 시 서비스 제공기관 간 예산편차 해소 방안 등을 검토하고, 대전시 사회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하여, 민간 의견 수렴을 통한 역할 설정하는 대전시 사회서비스원의 전략적 사업 검토 및 선정 등이 요구된다.

한편, 대전시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영하는 공공돌봄서비스기관은 민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의 서비스제공 역할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사회서비스가 지역 내 모든 주민들에게 적절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중증·경증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소외·원격지에 대한 서비스, 하루 생활 패턴에 따라 설계될 수 있는 서비스, 24시간 지원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거점형 순회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사회서비스의 사각 지대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세부 서비스 분야별로 차별성 있는 맞춤형 인력대체 지원사업, 노인관련 사회서비스, 종사자 교육 및 지원 등이 필요하다.

또한, 기초 지방정부가 사회서비스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공성 증진의 목적으로 설립한 사회서비스원 위탁운영을 통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심의하기 위한 광역 지방정부 산하의 운영심의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김윤수 2018).

www.kci.go.kr

2) 독립채산제 폐기

또 다른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독립채산제 운영 방식을 과감하게 폐기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윤을 생각하는 민간업자보다 공공성을 앞세운 사회서비스원이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나, 현실은 민간 업체에 밀린 채산성 악화로 사회서비스원 사업 중 손실이 발생해 지자체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20] 특히, 종합재가센터의 설립·운영과 관련해 노인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해오고 있다. 이 분야는 요양보호사 42만 명, 관련 업체 1만 개가 경쟁하고 있는 시장이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노인요양 사업에서 수익을 내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는 정부의 구상 자체가 비현실적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민간 업체들과의 경쟁 과정에서 충분한 일감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유휴 인력에게 지자체가 세금으로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사회서비스의 공적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공적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은 이윤추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동안의 정부 단가부터가 공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회서비스원이 종사자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면서 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공적 자원의 투입이 전제되어야 한다. 요컨대, 독립채산제는 민간의 반발을 의식한 결과이기도 한 바, 기존의 민간이 못했던 역할, 결국 차별성 있는 맞춤형 사업에 사회서비스원이 담당한다면 민간과 갈등하거나 경쟁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독립채산제를 유지할 이유도 없다.[21]

---

20) 왜냐하면, 정상적인 경쟁 환경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만, 재가 장기요양만 하더라도 비현실적으로 낮은 수가구조로 편법적 경쟁이 관행화되어 있는 환경(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 가사일이라도 좀 더 해주기,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기 등)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편법을 사용할 수 없는 공공 공급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은 기본적으로 경쟁이 안 된다.

21) 독립채산제를 유지한다면, 사회서비스원의 사회서비스는 새로운 공공의 서비스라기보다는 공공의 이름을 쓰는 또 다른 민간수준의 서비스 이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www.kci.go.kr

3) 많은 재정 및 예산 투입 확보

사회서비스원 사업의 인건비 및 운영비는 기존의 보조금, 장기요양보험 수가 등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본부 운영 예산에 대한 추가 지원으로 2022년 184억원을 추산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초기 운영 안정화와 종사자에 대한 생활임금 지급 등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자체 예산을 자율적으로 투입하고 있다(정부 24, 2020).

한편, 대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계획을 살펴보면, 대전시의 비용추산 및 추계의 자료는 수탁시설 및 종합재가센터 운영계획의 경우 신설 이후 유지 금액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없으며, 조직운영 경비의 산출에 대한 내용이 부실해 보인다.[22)]

사회서비스원이 직영할 시설의 재정소요와 동 사업의 결과가 야기할 수 있는 수가 인상 요구 가능성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원 운영비의 중장기적 변동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대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자체에 대한 중장기적 재정소요 변동 위험성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분석되어 있지 않으나, 사회서비스원 직영 시설 수요가 증가하고, 종사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서비스원 자체의 인력도 증가하고 인건비 및 운영비가 증가하는 것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업계획서상에는 사회서비스원 개소당 설립 및 운영 경비를 고정시켜 놓고 있으므로 이러한 재정 소요 변동 위험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의 적정한 시설들이 기존 수가와 보조금만으로는 운영되지 못할 경우, 지방정부의 보조가 불가피하다.

대전시 사회서비스원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중장기적 재정소요 변동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자체적으로는 지역사회복지계획상에 있는 당초 계획

22) 상기 <표 2>에서 보는 과와 같이, 조직 운영 경비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9억 8천만원으로 동일하게 추정되어 있고, 인건비의 경우도 2023년, 2024년 전년대비 단순 2배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다함께돌봄센터, 종합재가센터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금액의 추산 내역이 정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다.

www.kci.go.kr

과 사회서비스원 계획을 연계하여 재정의 운영이 효율성과 자체 소요 예산에 대한 최소한의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전시 사회서비스원 관련 계획 등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반영하여 대전시 복지예산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설종사자의 임금 격차 및 이직률이 심화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면 직영 기관과 민간제공기관간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민간에서 공공으로 이직률이 심화되면서 민간기관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민간분야 종사자 처우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재정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강화 논의에서 대전시는 이미 시범사업을 마치고, 설립하고 운영 초기에 있다. 사업의 타당성이 아니라 사업을 어떻게 하면, 공공성의 확보와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편, 아직도 사회서비스원 관련 법안 제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나, 이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 분야의 세밀한 검토가 요구되는바 차후의 연구과제로 하겠다.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관련해 시범사업을 넘어 단계적인 확산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경우 시행이 보류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대전시 사회서비스원이 공공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확산되기를 바라며, 사회서비스의 양·질적 제고에 일조하기를 바란다.

결국, 대전시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위해, 2019년 시범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검토하여 대전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방안과 예상 문제점을 분석·검토 후 유사기관 및 계획과의 중복(첩)의 비효율성 해소, 독립채산제 폐기, 많은 재정 및 예산 투입 확보를 제시하였다.

www.kci.go.kr

<참고문헌>

강혜규·김회성·안수란. 2019. “사회서비스 정책 전망과 과제.”『보건복지포럼』. Vol.267. pp.7-18.

강혜규. 2007. “한국사회서비스 정책의 현황과 서비스 확충의 과제.”『한국보건사회연구원』. Vol.125. pp.6-22.

관계부처 합동. 2018.『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방안』. 관계 부처 합동.

김가희. 2020. 대전사회서비사원 종합재가센터 설치를 준비하며; https://dwf.kr/board.es?mid=a10208000000&bid=0012&act=view&list_no=6664&tag=&nPage=1(최종검색일 : 2020/10/22).

김보영. 2019. “구호뿐인 공공성?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 평가와 대안 모색.”『비판사회정책』. No.64, pp.7-52

김보영. 2020. “[기획3] 사회서비스, 피상적 공공성이 아닌 실질적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제정 과제.”『복지동향』;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710550.

김연명·박상희. 2012. “공공복지인가? 민간복지인가?”『비판사회정책』. No.36. pp.7-38.

김연명. 2017. “사회서비스 공단 설치 필요성과 쟁점.”『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7 No.4. pp.520-536.

김영종. 2012. 한국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역사적 경로와 쟁점, 개선 방향.『보건사회연구』. Vol.32 No.2. pp.41-76.

김용현·손동기,『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충남연구원,

김용현, 손동기. 2018.『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충청남도.

김윤수. 2018.『사회서비스원 운영방안 모색-사회서비스 소포럼 운영 결과-』. 보건복지부

김진석·민소영·유동철·홍영준. 2017.『서울시 복지인프라 공공성 강화 방안』. 서울시복지재단.

데일리안. 2019. 김명연 “서울 사회서비스원, 박원순 낙하산.” 보도자료 (2019/10/05).

박정선. 2007. “민간자원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의 역할.”『한국지역사회복지학』. Vol.21. pp.73-93.

www.kci.go.kr

백선희. 2017.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방안 : 사회서비스공단을 중심으로.”『2017년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1-13.
보건복지부, 2018.『사회서비스원 운영 방안 모색-사회서비스 소포럼 운영 결과』.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9.『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9.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설립 본격 추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01/09).
서울복지재단 2016.
신경희·남우근. 2013.『서울시 요양보호사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서울: 서울연구원.
양기용. 2013.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변화와 공공성: 지역사회서비스 거버넌스를 중심으로.”『한국공공관리학보』. Vol.27 No.1. pp.89-114.
양성욱·최길수·류진석·김상우·김경현. 2019.『대전사회서비스원 설립 연구』. (재)대전세종연구원.
연합뉴스. 2020. “광주사회서비스원 초대 원장 후보에 시장 캠프 출신 등 2명.” 보도자료(2020/05/12).
이만우. 2018.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의 쟁점과 과제.”『이슈와 논점』 제1469호.
이승호·양난주. 2020.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의 고용성과 진단: 서울시 종합재가센터 사례를 중심으로.”『노동리뷰』. Vol.183. pp.99-111.
이재훈. 2018.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이슈페이퍼』 2018-02호.
이태수·남기철·김형용. 2019. “문재인 정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쟁점과 과제-공공성 강화와 분권화를 중심으로-”『사회복지정책』. Vol.46 No.3. 63-92
임정빈·유재남. 2019.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인식 차이 분석.”『정책개발연구』. Vol.19 No.1. pp.95-122
임정빈·유재남. 2019.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인식차이 분석: 경기도를 중심으로.”『정책개발연구』. Vol.19 No.1. pp.95-122.
정부 24. 2020. 부산시, 2022년 사회서비스원 설립 목표로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 중. 보도자료(2020/09/18.)
중도일보. 2020. 대전 사회서비스원 내년 1월 개원...복지부 2단계 공모 선정. 보도자료(2020/05/30).

www.kci.go.kr

한국경제. 2020. “민주노총, 사회서비스원 노조 싹쓸이.” 보도자료 (2020/09/17).
한국경제. 2020.“文정부 밀어붙인 사회서비스원, 부산시 중단.”보도자료 (2020/09/17).
한국경제. 2020. “민주노총, 사회서비스원 노조 싹쓸이.” 보도자료 (2020/09/17).
한국노총. 2016.“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한 요양보호사 및 보육교사 직접고용 방안.”정책이슈 브리핑.

투고일 : 2021년 2월 25일 . 심사일 : 2021년 3월 27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4월 5일

* 김학만은 충남대학교 행정학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우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행정이며,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행정론』,『저출산 고령사회의 복지정책』등과 다수의 논문이 있다. 교육부 규제완화위원회 위원장과 우송대학교 보건복지대학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 권정만은 충남대학교 행정학박사를 취득하고, 행정철학(행정 개념사), 복지, 도시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www.kci.go.kr

<Abstract>

Ways to strengthen publicity of Daejeon City Social Service Center

Kim, Hak-man
(Woosong University)
Kwon, Jeong-ma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urrently, the social service center is at the point of spreading to large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through a pilot project.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Daejeon, the establishment is planned and in progress in 2021. Accordingly, in relation to the social service center project, a more fundamental and specific strategy for realizing the public good of social services should be prepared. In this regard, this study examines the performance and problems of the basic pilot project for an appropriate management plan to enhance publicity, reviews the establishment plan and expected problems of the Daejeon Social Service Center, and based on this, the publicity of the Daejeon Social Service Center I would like to propose a plan for reinforcement. As a way to strengthen the publicity of the Daejeon City Social Service Institute, Solve the problems of overlapping with similar institutions and plans, abolish the independent debt system, and secure a large amount of financial and budget investment.

Keywords : Social service policy, social service institute, publicity

www.kci.go.kr